

기존 농민을 위한 농촌사회교육 유형분석

이 영 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개발연구부

The Typology of Rural Non-Formal Education for the Farmers

Young Dae Lee

Rural Development Divis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ummary

From 1995,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will be activated in the world market. Therefore more liberalization in agricultural are expected. Korean farmers should be trained to overcome the difficulty due to trade liberalization.

The non-formal education for farmers is carried out by various forms but does not fit need of farmers mostly. The major part of non formal training was focused on agricultural skills so there must be more emphasis on non-agricultural skills.

There are some lacks in linkage between training and government support for trainees. So more support for farmers trainees such as aspects(for example more financial support) and non economic support(for example the raising of farmers morale) are needed.

I. 서 론

현재 세계는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더 높은 능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지만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는 현재 농민들을 위하여 시의 적절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교육의 유형을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각 유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관련기관의 교육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0년에 실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53명의 현지 통신원

대상 우편조사결과를 수집 분석하였다. 1992년에는 농학계 대학, 전문대학 및 각도 농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도 활용하였다. 아울러 기존 농민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II. 기존 농민에 대한 사회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향

현재의 기존 정착 청년 영농인들의 영농정착 과정은 긍정적인 요인(즉 농장의 꿈, 돈을 벌고자, 농업이 좋아서, 농업의 장점 때문에, 농업계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기에 등) 보다는 부정적인 면(즉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도시 진출이나 타 산업 취업이 곤란하여, 몸이 아파서, 못 배워서,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착 영농인들이 충분한 자질(농업과 비농업 분야의)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기존의 영농 정착 청년 영농인들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연령별 농민의 지식과 기술의 충분 정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농민의 지식과 기술이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매우 부족과 부족을 합하였을 때 29세 이하가 82.3%, 30~39세가 73.8%, 40~49세가 79.0%, 50~59세가 88.6%, 70세 이상이 77.0%로 각각 나타났다.

더구나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화되어 가는 현상하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농민의 자질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기술, 정신자세는 다음과 같다. 국제화 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지식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①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세계적 농업지식 18.7%, ②전문적인 농업지식 18.7%, ③새로운 농업지식이 12.2%, ④대체작물 등에 대한 지식 11.0%, ⑤외국 농업여건에 대한 지식이 10.6%, ⑥농업개방 등에 대한 지식이 10.2%, ⑦현실의 여건에 대한 지식이 9.3%, ⑧세계속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4.9%, ⑨기타가 4.5%이다.

국제화 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선진기술,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이 22.3%, ②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업기술이 20.7%, ③우수농산물 생산기술이 17.7%, ④농산물의 규격화, 상품의 기술(과학영농기술)이 13.1%, ⑤고소득 작목 기술의 습득이 10.8%, ⑥농기계 기술이 8.5%, ⑦수입개방 대응작목 기술지원 미비가 5.6%, ⑧노후 노동력 대응기술은 1.3%이다.

국제화 시대에 농민에게 필요한 정신자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국제경쟁자세, 적응자세 25.6%, ②여유, 주인의식, 자신감, 긍지가 23.8%, ③인내, 노력이 10.7%, ④고급농

산물 생산하여야겠다는 자세가 10.7%, ⑤현실을 직시하는 자세 10.3%, ⑥용기와 희망, 신념의 자세 8.5%, ⑦단결, 협동이 7.8%, ⑧기타가 2.5%이다.

청년 영농인들의 자질에 대하여 농민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응력, 도시적응력, 의욕, 자신감, 판단력, 기본소양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영농인의 자질을 평균으로 나타낸 결과 ①사회적응력이 2.09점, ②도시적응력이 2.09점, ③의욕이 2.06점, ④자신감이 2.05점, ⑤판단력이 2.04점, ⑥기본소양 정도가 2.02점이었다.

Ⅲ. 기존 농민에 대한 사회교육 유형

1. 자질보충을 위한 사회교육유형에 대한 의견 조사

우리나라 농민들의 자질보충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①교육(전문가 교육, 기술교육, 실제적 교육)이 37.0%, ②기술습득 지원이 16.4%, ③외국농업시찰이 10.9%, ④농촌지도소의 역할 증대가 10.3%, ⑤우수인력 보충이 8.5%, ⑥TV, 라디오 교육이 7.9%, ⑦견학이 4.7%, ⑧기타(서적 보급 등)이 4.4%이다.

또 청년영농인의 자질 보충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①중농정책, 정책적 배려 강화는 45.7%, ②영농의욕 고취 강화가 23.2%, ③사회교육 및 농민교육 강화가 18.5%, ④도시견학 강화(선진사회 견학 확대)가 4.2%, ⑤외국농업 현지견학 확대(외국실정 언론보도)가 2.6%, ⑥정신함양, 애향심 고취가 2.6%, ⑦더 많은 접촉기회 제공이 2.1%, ⑧건전 여가, 오락 보급이 0.8%, ⑨기타(서적 보급)이 0.3%이다.

이들을 요약하며 ①각종 집합교육 강화(농촌지도사업등), ②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한 교육 강화, ③국내외 연수 강화(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 연수 강화), ④각종 서적의 보급 강화 등 4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기존 농민을 위한 집합교육 훈련의 현황과 문제

각종 농업관련기관에서 기존 농민을 위하여 다양한 집합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운영체제 및 교육내용은 기관에 따라 다르다. 이들 각종 기관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대학부설 교육기관, 생산자 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농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각 기관은 그 기관의 필요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 중앙정부수준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현재 농민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지도사업은 농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쌀 증산위주로 추진되어 온 지도사업체계가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뒤따라지 못하고 있다. 즉 영농기술 지도 중심의 지도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겨울 농민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농민들의 영농교육에 대한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인가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농촌지도사의 전문성 미흡 및 사기저하 현상이 있다. 전문특기분야의 지도사 육성이 미흡하여 농촌독가 대비 전문 농업기술수준이 저위에 있고 농촌지도사의 질적 저하로 대졸이상 지도사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농촌지도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현상도 있는데 직무만족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만의 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 감독이 많고, 지원은 적으며,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렵고, 지도사업의 장기 전망에 대한 의식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농촌지도조직과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농촌지도소가 군 단위로 통합됨에 따라 읍, 면 거주 농민들의 지도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특히 수도작 중심의 고령농가에 대한 지도사업의 필요

성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에 따라 1992년 부터 읍면 단위에 영농상담소의 설치를 재개하였다.

또 인사와 예산의 2원화 현상도 있는 바 인사는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 라인에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그에 따라 농민교육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고 예산 낭비이며, 일손만 빼앗는다는 비판도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 도 농민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즉 도와 군에서도 농민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 농민교육원의 연수분야를 전문분야와 기타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분야로는 영농기술과 농업기계교육이고 기타분야로는 농촌사회교육과 새마을 국민교육 등이 있다. 여기에서 영농기술분야의 종류에는 농기계 분야의 직업훈련 분야를 들 수 있다.

농기계분야를 강원도 도 농민교육원 농기계 직업훈련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은 농기계 정비 기능사 양성이며 교육기간은 2주간이다. 대상은 미진학 청소년, 시장, 군수 추천 16~40세 남자며, 인원은 40명이며, 훈련생에 대한 교육비, 교재비, 기숙사비, 피복비를 일체 지원하며, 교육기간 중 여비도 지원하며 졸업생에 대한 혜택은 지역 농기계수리,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연수 대상자 분야 및 인원은 전문분야의 영농기술 분야는 393-3,014명이었고, 농업기계 교육은 600-2,30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수기간은 1일에서 5일 까지이며 농기계 교육은 3일에서 14일 까지이다. 연수비용은 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었으나 농기계 구입비용은 국비 보조이었다.

교육 연수생에 대한 사후 자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둘째, 영농정보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예를 들어 농민교육지(영농기술정

보지)를 제작하여 교육수료생에게 배포한다. 셋째, 현지 출장지도도를 한다. 즉 교육자료 수집 등 각종 출장시 수료생을 방문 영농사례 대화 및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교육이수 후 서신을 발송한다. 다섯째, 교육수료생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기계 사후봉사 혹은 농번기 일손 돕기를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기구도 개편이 되었으며 교육내용도 농민교육 60%, 기타교육 40%로 변화하였다.

도 농민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의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농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이며 신규 농민 양성은 약하고 거의 기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공공단체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공공단체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공사 유통교육원(설립일시는 1985년)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산지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은 농수산물 유통 능력을 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전문교육을 통한 유통인의 자질향상과 유통시책의 홍보이다. 교육대상은 유통관계 공직자, 도매시장 종사자, 유통조성 관계자, 산지 유통 종사자 및 농민 등인데 교육인원중 농민비율은 약 10%이다. 교육의 효과로는 대다수 교육생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배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4%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라. 생산자 단체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농협은 농가경영의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하는데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데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83년에 안성에 농협지도자 교육원이 개원되었으며 1984년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도 연수원을 지도자 교육원으로 개편하였으며, 1984년에는 농협대학에 새농민 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농협의 교육사업(1990년의 경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합원 교육의 목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농민 조합원의 주인 의식 고취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우수 농산물 생산능력제고와 새로운 영농기술 흡수 등이다. 중앙단위, 회원 조합단위, 마을 단위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농협의 농가 경영지도의 목적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에 기여하며, 영농지도원을 확보하여 농민교육을 담당하게 함이다. 1990년 말 현재 총 1,425 단위조합과 42개 특수조합에 86.4%가 배치되어 있어 농가경영, 지역농업개발, 유통연계 지도를 한다. 모든 종합농협이 영농지도원을 확보 운영하는데 조합원 1,000명당 1인을 추가하며 영농지도원에 대한 농업경영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경영 기술교육 실시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가경영, 지역농업개발 유통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유통담당 상무제와의 관련 조합원 및 영농후계자 교육, 중앙단위에서는 신규 개발 작목을, 도 단위에서는 지역 특화작목을 교육한다. 농업 경영 기술 지원단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과계 교수, 농업 연구관, 독농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조합 희망 작목에 대하여 현지 교육과 자문을 실시한다.

기타 생산자단체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도 다양하다. 옥천 과수 영농 클럽의 교육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년 조직되어 매월 월례회를 갖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공동으로 자재를 구입 출하하여 과수재배 경영비를 절감한다.

마. 민간 단체에서의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농업기술자 협회는 농민대학을 통하여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흥농종묘회사는 흥농 농민

대학을 교육하고 있다.

바. 대중매체를 통한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대중매체를 통한 농촌 사회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신문에는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보, 한국농어민신문 등이 있고, 월간지는 새농민, 마을, 상업농경영, 각종 원예, 축산 관련 잡지들이 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 있다. 최근에는 각종 비디오를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사. 기존 농민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문제점

농업관련 기관에서 기존 농민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특히 생산 및 경영지도를 하고 있다. 영농지도 각 기관이 중복 난립(특히 군 단위에서는 시군농촌지도소, 농협, 축협, 농지개발조합등)되어 있다.

또 각 기관의 독자성 유지 및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농민의 요구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 볼 때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등의 기관이 각 기관의 고유영역 속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생산 및 경영 기술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농민의 요구는 대체작목 개발 및 농업경영 기술분야, 우수농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 진출, 판로개척이나 이것을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기존 농민교육을 위한 민간교육기관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하다.

3. 지역 농학계 대학, 농전예의 위탁교육 현황과 문제

1991년 7월에 발표된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에서는 우수농어민 양성을 위해 지역 농과대학과 농전 등에서 위탁교육을 하려 하고 있다. 즉 농민후계자, 선진농어가에 대한 전문영농 현장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축산, 시설원예, 과수, 화훼, 양식 어업등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농전

과 농과대학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지방농과대 및 농전 등에 농어민기술교육 과정을 방학기간중에 병설 운영하며 농발 기금 보조로 피교육자에 대한 숙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10년 동안 100천명에 대하여 1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농과대 및 농전 등에서 농어민 기술교육과정을 병설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계 전문대학과 대학 가운데 농민과 후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진주산업대학, 순천대학 및 농협전문대학 및 최근에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설 최고경영자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목적은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복지 농어촌 건설에 활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 경영능력, 농업정보 이론 등을 습득, 배양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농업부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교육대상은 경기도내 전 후계자 중에서 작목별로 희망자에 한하여 모집선발하되 100명 이내로 하며 작목별 인원은 10~20명으로 한다. 교과과목은 작목별 과학영농, 학술이론 및 현장실습, 일반 사회교양 등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한다. 교육비 재원은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수익금에서 매년 수탁교육기관에 지원하되 피교육자가 일부 자부담한다. 교육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편이다.

서울대학교의 뒤를 이어 충북대학교(1993. 9),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에서 비슷한 교육과정이 형성 운영되고 있다.

4. 선진 농업국에 대한 농민 해외연수의 현황과 문제

선진 농업국에 대한 현지연수를 통하여 영농의욕의 고취 및 농업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민에 대한 해외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

공사, 생산자단체 등 각 농민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가. 농어촌진흥공사의 전업농 해외연수사업

전업 농어민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국의 현지연수를 통하여 농업기술향상 및 영농의욕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의 농업을 보다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고, 선진농업기술 및 지식의 습득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마스크를 통한 홍보로 전업농 육성 대상 농가에 도 자신감과 의욕을 확산 유도 하는데 있다.

1990년도 부터 실시하였는데 연수인원은 90년 156명(5개국 6개 분야), 91년 260명(7개국 10개 분야), 92년 300명(7개국 12개 분야)이다. 연수비용은 연수직접 비용은 국고 70%, 농민 자부담 30%이며 대상국은 일본, 미국, 화란 등 7개국이며 연수분야는 수도 등 12개 분야이며, 예산은 1992년의 경우 754백만원이다.

사후관리 방안(경험 공유화 방안)은 대농민 교육이 424회에 걸쳐 30,5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수자 자율모임을 조직하는데 90~91년 연수자는 17분야 376명으로 구성, 23회의 모임을 갖는다. TV와 신문 등의 언론매체 및 지역 농민교육에서 해외연수 소개를 하고 있다.

문제점은 연수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90~91년의 기간중 416명으로 1개군당 3명정도에 불과하며 연수전후 교육관리의 미흡으로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의 습득이 곤란하며, 현지 견학 위주의 연수와 인식전환 차원에서의 연수에 그치고 있다. 연수자가 전업농가로 육성될 수 있는 각종 제도 마련이 미비하다. 아울러 농협, 농진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와의 차이점이 불명확하다. 이들 각 기관의 해외연수는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농촌진흥청의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이 제도는 일본과의 제 17차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합의(1984)로 시작 되었다. 농수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영농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연수국의 농어민후계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민간의교에 기여하며, 선진 외국의 최신농업기술, 농업경영기법의 습득으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배양하며, 농어민후계자에게 전문을 넓혀 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연수내용 및 추진방법 중점연수내용은 최신농업기술정보의 파악, 농업경영기법 비교진단(생산경영, 경영기록, 포장, 운송, 저장, 가공 등), 농민조합의 역할(농민과 조합과의 관계), 농민의 농업정보지식 수용과정(농업기술개발, 확산, 수용 과정 등)이다. 추진체계는 농림수산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지원이며, 농촌진흥청은 사전교육, 연수일정 협의 및 연수추진, 기타 시행업무이며, 시도(시군)는 지역별 인원배정 및 연수대상자 선정이다. 연수방법으로는 구내사전교육은 연수내용, 연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이며 해외연수 실시는 연수국의 농어업 현장, 관련기관 등의 견학 및 실습이다. 연수대상자 선정절차는 각 도지사는 분야별 연수대상 인원을 시·군별로 배정하여 도 농촌진흥원장 및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시장 군수는 해당 농어촌 지도소장과 협의하여 분야별 연수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연수대상자와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각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도 농촌진흥원장, 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와 협의하여 연수대상자를 확정(분야별 후보자 1인 포함)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도 농촌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특별시 직할시는 해당 농촌지도소장이 직접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한다.

다. 지방 자치단체의 해외연수 개요

각 도와 시군에서도 농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남, 경북, 제주는 1990년부터 시작하였다. 연수 목적으로는 강원도는 농업 선진국의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기회 제공 및 농

어촌 지도자의 사기양양 및 지도력 배양이다. 충남의 경우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선진 농업국의 기술습득기회 부여로 UR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선진 외국의 전문 농업 기술 및 경영기법의 습득으로 개방화 대응능력을 배양하며 농어민 후계자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다. 애로점으로는 연수대상 종장, 농업관계기관 방문 등 효과적인 일정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연수에 따른 농업 전문 가이드(안내)가 없어 외국의 농업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경상북도 진흥원). 각 도별로 보면 전남은 농어민 후계자 등 18명을 덴마크, 네덜란드로 파견하고 낙농 및 화훼재배 기술 및 글라스 하우스 국내보급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전남 보성군의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한다. 제주도는 1990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선진 외국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기법의 습득으로 개방화 대응능력 배양과 농어민 후계자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자긍심 고취가 목적이다. 연수대상자 선발방법은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어촌에 정착이 확고한 자, 지역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다. 문제점은 예산의 한계,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음, 장기 연수가 못됨, 유럽, 미국 등에 연수를 못함이다.

라. 생산자 단체

농협의 농민 해외연수를 살펴보면 이달의 새농민 부부를 일본에 연수시키고 있다. 1991년부터 실시되었는데 5박 6일간 실시되면 100% 비용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한다. 이달의 새농민 부부 가운데 신청자만 해당(1991년 120쌍중 2쌍만 선정) 된다. 대만연수는 대만과 교환사업으로 1991년 5명, 1992년 10명이다.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각 단위조합에서 많은 해외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협의 축산인 해외 연수는 1990년에 시작 되었는데 축산지도부 기술지도과가 주관한다. 선발은 각 도의 6개 분야에서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마. 민간단체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도 해외 선진농업 사찰단을 조직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비용은 10%가 재단 부담이고 연수지역은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화훼분야이다. 17박 18일의 일정으로 연수인원 29명인(농민20명)이며 연수분야는 화훼이다.

바. 효과와 문제점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민의 해외연수사업은 농민에게 견문을 넓혀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해외연수사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여 본다

첫째, 해외연수사업이 우수농어민 후계자 및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사기양양 차원 및 포상의 성격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도비에 의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수생들의 필요에 의한 연수보다는 선발과정에서 포상의 성격이 가미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연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인식전환 차원에서의 연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기술의 습득에 애로점이 있다는 점이다. 즉, 품목별 전문영농인(예: 경북지역의 사과 재배농가 또는 전남지역의 배 재배농가)이 해외연수사업을 통하여 전문화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수대상 농장 및 농업관계기관 방문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일정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연수에 따른 농업 전문 안내지가 없어 외국의 농업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연수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선발된 연수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출국전에 집합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여행사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V. 기존 농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방향

국제화 시대에 농민들이 잘 적응하도록 기존 농민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회교육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 중 각종 소집 교육훈련강화, 농학계대학 및 농전 위탁교육 강화, 선진농업국에 대한 해외연수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1. 기존 농민을 위한 각종 소집 교육훈련사업의 방향

각 기관들이 농민이 원하고 있는 지도 및 교육 수요를 빨리 파악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의 확대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농민을 위한 소집 교육훈련사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농민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공공 및 민간단체의 대 농민교육훈련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일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취약한 각종 교육훈련사업 등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 농민교육훈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농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도록 각 기관의 교육 내용을 개편함으로써 대 농민교육훈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대체 작목 개발 및 농업경영기술분야, 우수 농산물 생산 및 가공산업진출, 판로개척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의 요구를 가능한 수렴하는 방향에서 생산 및 경영 지도, 그리고 유통분야

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농업의 선택여지가 없는 40세 이상의 농민, 점차 농업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성,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일반 농민들에 대하여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도 엄연한 농업 종사자이며, 농업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농민을 위한 민간 교육기관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UR협상 타결이후 농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른바 파란불)의 하나는 농민의 교육훈련비 보조이다.

네째, 다양한 대 농민교육훈련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 첫째 방법으로는 대 농민교육훈련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대학의 농학계 대학 및 생산자 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즉,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지역농민의 욕구를 즉시 파악하고 이를 농촌진흥청과 국립대학 등이 연구 검토하여 대 농민교육훈련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다.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영농기술개발비, 연구자재 및 실습비 등을 지원하며, 기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생산의 협동심 고취 및 공동판매, 그리고 저장, 가공 등 유통시설분야에 대한 진출 등에서 상호 공통된 이익을 바탕으로 더욱 용이하게 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단위에서 기존 농민의 교육을 위하여 지역 농업개발센터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도 농촌진흥원의 지도기관, 국립대학의 농학계 대학 및 농업전문대학, 그리고 지역농업연구소 등이 공동 운영되는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연구기능과 지도기능이 공동으로 운영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즉, 농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도 수요가 지도

기관의 체계를 통하여 신속하게 수렴되고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이를 즉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민에게 전파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업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농업개발센터에 농민 훈련센터를 개설하여 농업 전문가와 농민의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각종 기술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농학계 대학, 농전예의 위탁교육의 방향

전국의 농학계 대학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한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농민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농업계 전문대학 가운데 위탁교육이 개설 가능한 곳은 연암, 대전, 정선, 제주전문대이며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경남전문대이며 농학계 대학 가운데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응답한 모든 대학이 개설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개설 계획 여부로는 전문대 중에서는 개설 계획 있음은 정선전문대이며 개설 계획이 없음은 연암, 대전, 경남, 제주전문대이다. 대학 중에는 개설 계획 있음이 우석대와 동아대이며 나머지 대학은 개설계획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농학계 대학 및 농전의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고하며, 재원의 계속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각 대학들은 지역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농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영농인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진주산업대와 순천대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위탁교육이 전문영농인의 육성보다는 신규 영농인의 양성에 전념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의 위탁교육은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미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대학에 축적된 각종 전문농업기술을 위탁

교육과정을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선도 농민을 양성함은 물론 지역농업 개발의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선지 농업국에 대한 농민 해외연수의 방향

향후의 해외연수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인식전환 차원의 연수가 아닌 내실 있는 연수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해외연수가 단순한 해외연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선도농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해외연수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해외연수 출발전에 관련 방문국의 시찰내용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연수 중에는 짧은 연구기간 동안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일일보고 및 토론 기회를 준비하며, 연수 후에는 연수 기회가 사유화로부터 공유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외연수자가 연수후에 의욕을 갖고 선도농어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농규모의 확대 및 영농시설의 현대화 등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제공함으로써 연수자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해외연수 추진 기관별 의사 교환이 원활하게 되어 비슷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특정 동일 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반복 연수시키는 경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해외연수사업을 추진하는 각 기관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이다.

V. 결 론

현재의 농민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고령화된 집단이고 다른 하

나는 젊은 집단이다. 고령화된 집단은 과거에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젊은 집단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지만 이들에게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자질을 높여주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평생교육체제의 도래와 함께 기존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따라야 하겠다.

기존의 농업기술 분야를 위한 교육은 비교적 다양하나 농민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경비로 지출하면서 찾아 배우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각종 농업기술 교육기관이 농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수요자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이 교육되어야 하겠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의외의 다른 교육분야(예를 들어 학위취득, 교양증진)의 교육도 상당수 있지만 농민들이 잘 모르며 농민들이 이 분야에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분야에서도 농민대상 사회교육기관은 농민들의 교육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 농업분야든 농업의 분야든 교육이수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 농지 구입자금의 추가지원 등 경제적인 면과 농업사 자격부여 등 비경제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VI. 참고문헌

1. 이영대. 농가가구원의 세대별 직업성취 유형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학 4집. 1994.
2. 이영대, 정명채.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P. 229. 1990.
3.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 농업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P. 251. 1991.
4.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P. 254. 1992.
5. 이영대, 김종숙, 정명채. 농업계 학교 교육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1993.
6. 최원개. 산학협동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농민 후계자 육성을 중심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의 성과와 농협중앙회],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의 성과와 과제]. 1984.
7. 최원개. 농업전문대학에서의 영농후계자 및 농민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8:4. 1986. pp. 105-112.